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5가단57927 구상금
원 고 울산신용보증재단
대표자 이사장 ○○○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15. 11. 3.
판 결 선 고 2015. 11. 24.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094,569원 및 그 중 62,928,139원에 대하여 2015. 6. 8.부터 2015. 7. 28.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2. 8. 20.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보증원금 7,600만 원, 보증기한 2013. 8. 20.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들은 위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해 C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7,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3) 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그 보증기한이 2015. 8. 20.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1) C이 경남은행과 약정한 기간 내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5. 6. 8. 위 은행에 62,928,13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2015. 7. 13. 기준으로 C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액은 대위변제금 62,928,139원, 가지급금 166,430원 합계 63,094,569원이고, 약정 지연손해율은 연 12%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연 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C을 대위하여 변제한 62,928,139원, 가지급금 166,430원 합계 63,094,569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62,928,13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6. 8.부터 이 사건 최종 소장 송달일인 2015. 7. 2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내용

○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서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특정되지 않았고, 보증기간 및 연대보증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보증채무최고액, 보증기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본을 수령하였음"이라고 기재된 부분에 피고들이 서명·날인하지도 않았으므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연대보증약정은 효력이 없다.

○ C은 2015. 5. 18.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 3 규정에 따라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감정·면제의 대상이 된다.

2) 판단

○ 먼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관련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할 당시 작성된 연대보증서의 "연대보증인이 호의보증인인 경우(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보증인에 해

당)"라는 기재 아래에 있는 보증채무의 최고액, 보증기간, 연대보증인란에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그 아래 "보증채무최고액, 보증기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본을 수령하였음"이라는 기재 옆에 피고들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되었는바, 위 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기업의 대표자, 이사 등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같은 호 다목은 "기업의 대표자, 이사 등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인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A은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B은 C의 감사인 사실, 피고들이 작성한 연대보증서의 "연대보증인이 호의보증인이 아닌 경우(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보증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라는 기재 아래에 있는 연대보증인란에 피고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서명·날인이 되어 있으며, 입보사유란에 피고 A은 '기업경영을 사실상 지배', 피고 B은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 행사' 부분에 체크(v) 표시가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C의 대표이사 또는 감사로서 C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거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인 보

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다음으로 신용보증기금법 관련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원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관내에 소재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신용보증기금법이 아닌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 3 규정과 같이 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음에 따라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된다는 취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는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신용보증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주리